



# 기획연구

##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와 군부의 위상 및 역할 변화

최 성 / 고려대학교 정치학 강사

#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와 군부의 위상 및 역할 변화

최 성 / 고려대학교 정치학 강사

## 머리말

**‘김정일 정권’<sup>1)</sup>의 권력 엘리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과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 김정일 정권은 비록 ‘공식적인 승계’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일성 사후 북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등을 타개하는 데 김정일 자신의 모든 인적·조직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를 이해함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진로’를 이해하는 첩경일 수 있으며, 역으로 ‘김정일 정권’ 하의 긴급한 당면 현안을 이해하는 것은 곧바로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특징과 성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모든 권

력의 핵심은 당에 있었다. 당이 국가를 대했던 것이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의 일반 법칙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심각한 체제 위기의 국면에 들어서면서 당의 권력이 군으로 이전되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포스트 김일성시대’의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체제 위기를 미봉하기 위해 ‘군부 중심의 위기 관리체계’라 일컬을 수 있는 극단적 형태로 정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군부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해보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김정일 정권 하의 핵심적인 권력 엘리트의 인적 구성과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 그리고 현 김정일 정권 하에서의 주된 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1) 여기서 사용하는 ‘김정일 정권’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김정일 비서로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특수성 상 실제 북한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주요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 김정일 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라 사용한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김정일 정권의 등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 '김정일 정권' 과 관련한 북한 연구가 너무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실제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 엘리트군의 구체적인 인적 배경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 (empirical survey)는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는 비판적 문제 의식때문이다.<sup>2)</sup>

둘째, 김일성 사후 가중되는 구조적 위기 국면 속에서 특히, 권력 엘리트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군부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부 엘리트들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김정일 정권 하의 군부의 위상 강화가 체제 안정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 당·정·군의 실세들

### 김정일 정권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권력 엘리트의 포진

#### ○ 김정일 정권의 당면 과제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구성 및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이 안고 있는 당면 과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북한체제에서 자의적

이고 폐쇄적인 권력 엘리트의 충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권력 엘리트군의 부침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 몰려 있는 북한의 위기 상황은 완충기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작년초 '공동 사설'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체제 강화를 위해 이른바, '사회주의 정치 사상 진지와 경제적·군사적 진지' 등 사회주의 3대 진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동 사설'도 작년과 궤를 같이한다. 김일성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으로 어떻게 무장하느냐"의 여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설은 경제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의 방침을 계속 유지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완충기가 완료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공 여부를 전혀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3대 방침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최고 사령관의 제1근위병 제1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성(1997), 「북한정치사」·「북한학개론」, 풀빛 참조.

점은, 올해에도 군부를 중심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김정일 정권 앞에 놓여진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엘리트 집단의 내구력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것이 그 하나겠고, 당·정·군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방 및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필요 물자 및 식량의 유입과 자체 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자본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식량난 등으로 인해 주민 통제 기제가 상당 부분 상실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상적 통제의 강화와 시급히 요구되는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올해에도 김일성 유훈 통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이탈 등 체제 동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전력 투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는 군부의 역할이 가장 비중있게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식은 단기적으로

는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의 착수만이 해결의 실마리라 할 수 있다.

#### ○ 김정일 정권의 핵심적인 권력 엘리트

##### ① 당·정 핵심 엘리트<sup>3)</sup>

먼저 당 엘리트들에 대해 살펴보면,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노동당의 핵심 엘리트군으로는 우선 중앙당에 포진해 있는 비서들을 들 수 있다. 계웅태(79, 사법 및 공안), 전병호(73, 군수), 김기남(70, 선전), 최태복(68, 교육), 김용순(63, 대남)과 김국태(72, 사상), 사회문화연락부장 리창선 등이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김정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둘째, 외교 분야의 핵심들이다. 우선, 외교부 부장 김영남(金永南, 72)은 당 서열 7위의 정치국원으로 국제부장·국제비서를 역임했던 거물이다. 김용순(金容淳, 63) 역시 당 서열 23위로 당 국제부장·국제비서 등 외교계에서 일하다 대남 비서로 옮겨 앉은 외교 실세이다. 당 국제부장인 현준극(玄峻極, 74)은 언론계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중국 대사와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1994년 12월 국제부장에 임명됐

3) 본 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최고 엘리트의 개인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1차 자료를 토대로 하고, 그밖에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북한 인명 사전」(1990) 등 다수의 북한 인명 사전 참조.

으나 황장엽 망명 사건의 여파로 인해 실각되었고, 그 후임으로 전 국제부 부부장 김양건이 임명됐다.

이들보다 급은 떨어지지만 강석주(姜錫柱) 외교부 제1부부장도 북한 외교의 최대 현안인 對미일 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미 경제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김정우(金正宇)이다. 그의 현 직책은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대외경제협력위원장이자이다.

셋째, 김정일 정권의 경제 브레인들을 들 수 있다. 현재 권력 서열 6위인 강성산 총리는 엘리트 코스인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체코 프라하공대에서 유학했으며, 전 총리 연형묵·이근모와 함께 북한 경제를 진두 지휘해온 경제 테크노크라트다. 그러나 1996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식 이후 근 1년간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아 실각설, 건강악화설 등의 추측을 낳게 한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올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5주년 기념식에서 주석단 8위로 다시 복귀함으로써 그러한 추측들이 빗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산의 경우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년간 군수 공업 부문에 몸담은 당 비서들인 '전병호'와 '한성룡'도 현직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나이가 많으나 김정일이 실질적인 통치를 전담하다시피 한 80년대

후반부터 중용됐으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이밖에 노동당에서는 김정일의 친동생(여)으로 경공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와 재정경리부장 '로명근'도 김정일의 측근 인물이자 실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원의 경우 경제 부총리들 가운데서 최영림·홍성남·김환·김복신과 대외경제위원장인 이성대 등이 있다. 최영림을 비롯한 경제부총리들은 다년간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주역이고, 이성대는 북한의 대외 개방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들외에도 지난 1992년 총리에서 물러나 현재 자강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서 내려가 있는 연형묵·김달현의 후임으로 국가계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형,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 윤기복, 김경희의 경제 가정 교사였던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박남기 등도 당분간은 자기 자리를 고수하거나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주체 농법'의 실질적인 창안자로 알려져 있는 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는 식량난 등의 문제로 실각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권의 최대 버팀목은 과거 김일성 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오던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친인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김일성의 사촌 동생 김신숙(1986년 사망)의 남편이고, 총리 강성산은 김일성의 이종 사촌이며, 부총리 김창주와 당 중앙위 부장 김봉주는 김일성의 사촌 형제이고, 김달현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는 김일성의 조카뻘이며, 당 경공업부장 김경희는 김정일의 여동생, 당 청소년사업부장 장성택은 김경희의 남편이다.

김일성의 외척으로는 평양시 당 책임비서 강현수, 정치국 후보위원 강희원, 당 통일전선부장 강주일, 당 역사연구소장 강석승 등이 있고,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다 사망했다는 오중흡의 아들 오극렬 당 군사부장, 김혁의 아들 김환 부총리, 6·25 때 전사한 군총참모장 강건의 아들 강창주 군단장, 연형묵 자강도 당 책임비서, 빨치산 출신 전창철(1982년 사망)의 사촌 동생 전하철 당부장, 6촌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등이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

이들은 실제 공식적인 직함에 나타난 권력 서열과 형식적인 권한 이상으로 김정일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군부 엘리트

김정일은 군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 노력을 통한 북한체제 안정에 대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 노력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7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두 단계로 나뉘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김일성 주석 사망 전으로 명분과 위상 강화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90년대 초부터 연이어 군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이를 정당화·합리화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최초로 김정일이 군 관련 직책을 부여 받은 때는 1990년 5월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선출된 뒤부터이다. 뒤이어 1991년 12월(당 중앙위 제6기 19차전원회의)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실질적인 통수권을 거머쥐게 된다. 그리고 1992년 4월 20일 원수로 추대된 뒤 그 다음해 4월에는 국방위원회<sup>4)</sup>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김정일의 군에서의 범·제도적 정당화가 마무리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군 내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김정일의 군부 다지기가 완성되어간다. 그것은 김정일이

4) 1992년 개정된 4월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을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①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 건설 사업을 지도한다. ② 중요 군사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군사 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를 수여한다. ④ 유사시 전시 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 사령관에 추대된 후인 1992년 4월 23일 북한군 창군 60주년을 기해 취해진 662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승진 인사가 그 좋은 예이다.

두번째 단계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인 1994년 7월 이후로, 김정일이 군내 입지를 완전히 구축해가는 시기이다. 이 과정은 대대적인 군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1995년 10월 8일과 13일 북한 지도부는 당 창건 50돌을 기해 인사를 단행했다. 그 핵심은 1995년 2월 오진우의 사망으로 8 개월 동안 공석이던 인민무력부장 및 총정치국장에 대한 임명이다. 인민무력부장에는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이 임명되었고, 총참모장에는 김영춘(차수), 신설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는 김광진(차수), 총정치국장에는 예상과 달리 조명록 공군사령관이 기용되었다. 이 인사를 통해 총 19 명의 고위급 장성이 승진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차수였던 최광과 이을설(호위총국장)을 원수로, 대장인 조명록(공군사령관), 이하일(당 군사부장), 김영춘을 차수로, 상장이었던 김하규, 현철해, 김병률 등 3 명을 대장으로, 전기련, 이명수 등 5 명의 중장이 상장으로 각각 승진된 것이다.

이 인사의 특징은 첫째, 기존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사망)와 같은 군 내의 독점적 권력 집중이 아닌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의 분산을 통한 군부 내의 권력 분점을 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 분

산의 의도는 군부 내의 역할분담체계를 세움으로써 안정적인 김정일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 여겨진다. 즉, 오진우의 경우 7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었으며, 북한군 내부에 상당한 카리스마를 구축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견주어볼 때, 오진우의 사망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음과 동시에, 김정일의 군내 확실한 입지 구축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권력 분산을 통한 직할명령체계의 구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승진 인사를 통한 군 내부의 사기 진작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사회적 혼란 과정을 수습하는 데 있어 군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해법을 군 인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5년 군의 인사 문제는 김정일의 군내 권력 분산을 통한 직할명령체계의 공고화와 군 사기 진작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군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잣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회생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완충기가 끝난 작년에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오히려 산적해지고 있

는 상황이다. 이는 당연히 군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 속에서 올해 2월과 4월에 의미있는 군 내부의 인사가 추가적으로 단행되었다. 올 2월 9일 북한은 최고 사령관 명령 제0087호(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에 군사 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를 통해 장령급 인사 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 대해 “인민군 지휘 성원들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주체의 혁명 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라는 내용으로 군에 대한 김정일의 각별한 믿음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상장 김격식, 주상성, 김성규, 박재경을 대장으로, 소장 박영하, 이창환을 중장으로 진급시킨 것이다.<sup>5)</sup> 이들 가운데 대장으로 승진한 4명의 군 장성들은 혁명 3세대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급이나 김정일의 군 시찰시 김정일을 수행하는 김정일의 측근 인물들이다.<sup>6)</sup>

그리고 뒤이어 ‘김일성 동지 탄생 85돌 및 조선인민군 창건 65돌’을 맞이한다는 명분 하에 4월 13일 최고 사령관 명령 제0088호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에 군사 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를 통해 군 장성 123명에 대한 대규모의 승진(차수 4명, 대장 1명, 상장 8명, 중장 37명, 소장 73명)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장인 김일철(해군사령관), 박서기(820전차군단장), 전재선, 이종산을 차수로, 상장 정창렬을 대장으로, 김룡운, 이용환 등 8명을 상장으로, 최상려, 이정부 등 37명을 중장으로, 김성낙, 배봉오 등 73명을 소장으로 각각 승진 인사하였다.<sup>7)</sup>

이 승진 인사에서 김일철은 김광진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박서기를 평양방어사령관에, 전재선을 제1군단장에, 이종산을 인민군 부총참모장 겸 군수 동원국장에 각각 임명한다. 이로써 대장급 이상인 인민군 장령은 총 32명으로 증가하게 된다.<sup>8)</sup>

이번 승진 인사의 의도는 첫째, 대장 태병렬(2.4), 인민무력부장 최광(2.21),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2.27)의 사망으로 인한 인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둘째, 대부분의 인사가 보직의 변경없이 계급만 승진된 것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물질적인 보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사기 진작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

5)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 동향」(1997. 2.10~16), 제317호, pp. 13~15.

6) 김용현(1997. 5), “북한 엘리트 연구/군 엘리트”, 「통일한국」.

7) 통일원 정보분석실(1997. 4.12~18), 「주간 북한 동향」, 제326호.

8) 통일원 정보분석실(1997. 4.12~18), 「주간 북한 동향」, 제326호.



로 여겨진다. 셋째, 김일성 주석 사망 3년상의 마지막인 올해에 김정일이 군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군체계를 대대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완벽한 군부 장악을 위한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의도를 가진 군 인사를 통해 김정일의 군부 장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김정일 정권 권력 엘리트의 특징

#### ○ 군부 엘리트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군부 엘리트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부 부상의 특징들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빨치산 출신의 노령층의 자연사와 함께 김정일 측근의 군부 인사들의 대거 등장으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김정일, 위원 전병호, 김철만, 이을설, 이하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원로들에 대한 상징성의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 군사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공식인 상태에서 김정일, 백학림, 이을설, 이두익, 김두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오룡방, 김하규, 이하일,

김익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직업 군인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김정일이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될 경우, 이들이 군사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여겨진다.

둘째, 대부분의 인물들이 항일 빨치산 또는 2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부 가운데 항일 빨치산 출신은 최광(사망), 이을설, 김광진(사망), 조명록, 김철만, 전문섭, 김익현, 백학림 등이며,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은 오극렬, 김두남, 김광진(사망), 오용방, 조명록, 김일철, 이봉원, 김병률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군 핵심들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강고한 친위 세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군부 인사를 통해 중앙 정계에 다수의 군부 출신들을 상향 배치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높임과 함께 군부 다지기의 이중 효과를 노리는 군부 중심의 국가 운영 방향을 지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 주석 사망 추모대회의 주석단 서열을 살펴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올 추모 행사의 경우, 38위권 내에 군 인사가 12 명이나 포진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군에 대한 현 지 지도 수의 증가 및 수행 인사의 면면들 속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군부 다지기의 마지막 작업<sup>9)</sup>은 아마도 김정일의 공식적

9) 필자가 생각하는 '군부 다지기'란 김정일의 군 장악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된 일련의 작업이란 뜻이 아니라, 권력 중심을 당에서 군으로 옮아가기 위한 정비 작업으로서의 '군부 다지기'를 뜻한다.

인 권력 승계를 전후해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 표징들은 공식 중인 인민무력부장의 임명과 함께 이루어질 군부의 인사 문제일 것이다.<sup>10)</sup> 그 폭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김정일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로 분석된다. 이 인사 과정에서 군부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사 과정에서 부각될 군부내 인물들로서 우선 공군사령관 출신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들 수 있다. 조명록은 빨치산 세대의 막내격으로서 김정일과의 깊은 인연<sup>11)</sup>을 고려할 때 차세대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김영춘, 김일철, 박기서, 전재선, 이종산, 이하일 차수, 대장급으로서 현철해, 박재경, 장성우, 원용희, 김영룡, 상장급에서는 이명수, 김대식 등 많은 군부 인물들이 중앙 정계에서 무게있는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실례는 주석단의 서열 변화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1996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모대회와 1997년 7월 8일 3주기 추모대회에서의 주석단 서열을 보면, 2주기에 비해 3주기 때, 군부 인사가 10명(2명 사망)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광과 김광진의 사망을 고려할 때, 실제적 증가 수는 4명이다(〈표〉참조). 당·정에서는 오히려 거의 인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무원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과 지속적인 군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표〉 김일성 사망 2주기와 3주기 추모대회의 주석단 서열

2주기 추모대회 (1996. 7.8)	3주기 추모대회 (1997. 7.8)
김정일	김정일
이종욱	이종욱
박성철	박성철
김영주	김영주
김병식	김병식
최 광	강성산
김영남	김영남
계응태	계응태
전병호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이을설	조명록
조명록	김영춘
김영춘	한성룡
김철만	양형섭
최태복	최태복
양형섭	김철만
홍성남	홍성남
최영림	최영림
홍석형	홍석형
김기남	김기남
황장엽	김중린
김중린	김용순
김용순	백학림
김복신	전문설
김윤희	김복신
장 철	김윤희
전문설	장 철
윤기복	공진태
김광진	윤기복
백학림	이하일
김익현	김일철
이하일	김익현
류미영	전재선
김성애	박기서
오형진	이종산
	류미영
	김성애

주: 1) 서열 순서로 나열하였음.  
2) 밑줄 친 부분은 군 인사임.

서 군부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실무형 테크노크라트의 위상 강화  
(경제·외교 분야)

김일성 사망으로 절대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일 앞에 놓여진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경제난 해소가 김정일 앞에 놓여진 최대 과제이다.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치 못하면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일성 생존시 마련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완충기 과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나, 남북 당국간 경제 협력은 거부하면서도 우리 민간 기업에게는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이중적 태도, 그리고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 등은 현재 북한 당국이 경제난 해소에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 브레인들

의 면면을 분석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밀려났던 개방파들이 속속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예상의 기저에는 경제와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존의 당 원로들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이다. 따라서 실무적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부상할 것이다. 특히, 당 비서국이나 정무원 등에 포진해 있는 외교·경제통들의 진출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들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개방과 현 체제 유지라는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나, 그 해결의 탈출구가 개방을 통한 방식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북한 지도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형 테크노크라트의 위상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대세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방파만이 득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가 경제 테크노크라트의 성향이나 능력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며, 또한 현재 경제 사정이 일부 사람들의 힘으로만 정상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이다. 특히,

10) 일부 언론 보도(「한겨레신문」(1997. 7. 6))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일 비서가 8일 김일성의 3주기가 끝난 뒤 대규모의 당·정 및 군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리고 공식인 인민무력부장에 조명록 군 총정 치국장이 기용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으나, 실제적인 인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다만, 인민무력부장 임명에 있어 '유훈 통치'의 지속성을 유지할 때, 빨치산 1세대의 상징성을 고려 이을설이 임명될 수도 있으며, 세대 교체를 통한 완벽한 김정일 중심의 군부 다지기를 중심에 둔다면 조명록이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11) 조명록은 1938년경부터 김일성의 호위병·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출신으로 공군사령관을 역임한 공군통이며, 그는 60년대 중후반의 호위국 부국장, 부사령관 시절에는 김정일이 호위국을 직접 장악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돌본 인연이 있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영구(1997. 7), 「김정일의 권력 기반과 인맥」, 「통일경제」, pp. 20~21).

현재까지도 군수 공업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여기에 군부의 위상이 확장되는 것도 개방파들의 입지를 좁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만경대혁명학원, 3대혁명소조 출신들의 대거 포진

김정일이 당·정의 핵심 위치에 포진시켜 놓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을 비롯해 오랫동안 그가 직접 통제·장악해온 3대혁명소조, 국가보위부, 조직지도부 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학원 출신들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굳혀가던 지난 1976년 중반부터 부상하기 시작, 1990년 현재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가운데 12.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 정무원 총리인 연형묵, 부총리 김환, 노동당 중앙비서 전병호·한성룡 등도 이곳 출신이다.

이들은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정일과 같은 혁명 2세대로 김정일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혁명소조도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굳히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의 친위 인맥에서 빼놓을 수 없다.

3대혁명소조는 북한에서 지난 1973년 2월 사상·기술·문화혁명 등 이른바 3대 혁

명을 추진하기 위해 젊은 당 간부들과 대학 졸업반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당외 조직이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이 조직의 총책임자를 맡게 되면서 이들을 모든 당 조직, 정치 기관, 공장과 기업소, 사회 문화 기관, 교육 기관, 군부 등 각급 조직에 파견, 세대 교체와 새로운 체제 구축에 앞장서도록 독려했다. 이들은 현재 40~50대로 사회의 중추적 실무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역에 이들의 대거 포진은 김정일에게는 상당한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인적 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 자연스러운 권력 엘리트 교체의 측면

김일성을 제외하고 최근 사망한 북한내 최고 권력 엘리트로는 당쪽의 대표적인 인물은 허담, 서철, 현무광(당 검열위원장), 이봉길(당 검열위원장), 권민준(당 부부장) 등이다. 사회 단체 인물로는 이계백(사민당위원장), 한기창(전 직총위원장), 고기준(기독교도연맹 서기장) 등이 비교적 비중이 큰 인물들이었다.

군부 쪽에서는 많은 고위 인물들이 사망했다. 전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1996. 2.25)와 최광(1997. 2.21)의 사망,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1997. 2.27), 당 중앙위원이자 조국해방전쟁기념관장 태병렬(1997. 2.4), 최고국방위원 주도일, 군 대장 김봉을, 조명선, 김리창, 그리고 상장 김성국

등의 사망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거의가 군의 '원로'로 대접받던 인물들이었고, 사인은 '오랜 병환'이었다. 한편, 북한 권력 중심부의 '변화'에 최대의 변수로는 '항일 빨치산 원로'들이 꼽히고 있다. 김일성과 함께 북한 정권을 수립한 인물들이고 아직도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고 있어서이다. 이들 원로 그룹들은 권력 판도가 김정일에 의해 주도돼 다시 짜여질 경우 고령이고 북한 정권의 '산 증인'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상징적인 인물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명예 퇴진'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 구도는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김정일의 측근 세력들이 당·정·군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와 군부의 위상 및 역할 변화

### 군부 위상의 확장 배경

북한 군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있음은 특히 김일성 사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5년부터 신년사를 대신한 3대 신문 공동 사설에서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이 빠지고 군 기관지 「조선인민군」이 들어갔으며, 김정

일의 활동도 군사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문·방송에 소개되는 김정일의 직함은 '국방위원장'과 '최고 사령관'뿐이다. 공개적 활동에서 김정일의 주변에 당·정 관료들보다 군 장성들이 있을 때가 더 많다.

또한 최근 조선노동당은 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고난의 행군 정신'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슬로건에 '혁명적 군인 정신'을 첨가시키며 하나의 이념적 체계로서 '군 중시 사상'을 내놓고 있다. 즉,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일련의 군부 중심의 관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식량난·구조적 경제난으로 일컫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3년간의 완충기를 통해 해소하려 했던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의 혼란과 정치 변동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년간의 완충기의 핵심 테제는 '경공업·농업·무역제일주의'였다. 이 과제는 당의 지도와 정무원의 실제적 집행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당과 정무원의 작동 메커니즘이 많은 부분 와해되지 않았나 하는 단초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당에 대해서는 1996년말 김일성대학 창립 50돌 기념식 연설에서 김정일

12) 「내외통신」(1997. 3.6), 제1047호.

의 질책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올 1월 19일 대규모 회의에서는 김정일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당·정 일꾼들에게 모든 방식을 바꾸라고 지시했다.<sup>13)</sup> 이 사실은 완충기의 과업을 당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정무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농업 관련 부문에 관계된 인물들은 지방 단위까지 대부분 실각되었다. 따라서 1993년 말부터 시작된 3년간의 완충기의 실패와 김일성 3년상을 탈상한 현재까지의 과정은 당·정무원의 실권 상실과 군부의 급부상이 정비례했던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일은 당·정·군의 선택 활용 수단 가운데 군으로의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negative selection)을 한 것이다.

둘째, 북한 지도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연적인 상황이나, 개혁·개방은 구소련과 중국, 동구에서 보았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붕괴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음을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북한이 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북한은 방충망식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지하 경제 및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은 일사

불란한 수직명령체계인 군체계를 사회에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 공허 분단 상황을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매개점으로 삼아왔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 겪고 있는 위기 국면의 원인을 자본주의 진영 특히, 한국에 전가시키면서 계속적인 이데올로기적 위기 조성을 통한 대내 주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적을 가상으로 하여 對주민 통제력을 확보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연적 요구로 하나의 적을 포기한, 남북한 대립 구도만이 남게 되었다. 남북한 대립 구도의 축 또한 체제 경쟁적 구조에서, 이제는 군사력 대결 구도만이 남은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 대치의 현장에 있는 군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김정일에 대한 충성 및 효성 강조 및 북한 주민을 일체화하는 '수령결사옹호정신'의 강조를 통한 전체 사회의 유기체적 운명공동체(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내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군부의 활용이다. 북한군의 경우, 김정일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해 70년대 초반부터 각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군 지도부의 핵심적 인물들이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한 빨치산 1세 및 2세, 그리고

13)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7, 8), "김일성 사후 3년과 북한의 정치·경제 전망", 「통일경제」.

김정일이 다닌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다. 90년대 들어 당과 정에 테크노크라트의 실무형 인사들의 배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군부의 경우는 보수적 인물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해왔다. 즉, 가장 안정적인 인적 구성을 군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군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식 변화

북한 사회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식량난과 경제난, 그리고 내부 자원의 고갈,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 교류의 상실 등 경제를 타개해나갈 방법이 외부 자본주의 진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방법은 개방과 개혁의 길을 걷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북한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미봉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핵심은 군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내부의 반발을 가상의 적을 상징하는 準전시 상태의 위기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쏘주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당·정·군의 체제에서 군사 부문으로 대부분의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의 군 위상과 역할에 관한 발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대학 창립 50돌 기념 연설<sup>14)</sup>에서 당 간부들에게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당 사업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는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인민군 군 부대를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김정일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 방향으로서 군대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기존 당·국가체제에서 당의 중심적인 역할이 군으로 이전된 듯한 뉘앙스를 다분히 풍기고 있다. 또한 올 2월 16일 김정일의 55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 대회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 최고 사령관 김정일을 위하여 자폭 정신이 차 넘치고, 최고 사령관 명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sup>15)</sup>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폭 정신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뒤이어 「민주조선」에서는 “인민 군대의 총창 위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의 결정적 역할을 인민 군대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sup>16)</sup>

이처럼 일련의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 및

14) 「월간 조선」(1997. 4), 김일성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지금 식량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15) 통일원 정보분석실(1997. 2.10~16), 「주간 북한 동향」, 제317호.

언론 매체들은 전사회가 군대와 같은 체계로,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체계로 작동될 것을 제기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진로의 핵심이 인민 군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 군과 전체 북한 사회 내에서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로동신문」 4월 20일자에는 김정일을 '김일성형의 탁월한 군사 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sup>17)</sup> 최근에는 "김정일 동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그의 존함은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의 모든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8)</sup> 이처럼 항일 무장 투쟁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 자신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상화 작업을 통한 북한 사회의 유일적 지도자로서, 전사에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선전들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군 내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 형태들은, ① 군 부대 대상으로 '수령결사옹위 전위부대', '자폭부대', '소왕청전위군' 징취운동 등 대중군사운동의 발기·전개, ② 소대 단위 내부반에 '3대 위인상'<sup>19)</sup>을 부착토록 한

것, ③ 김정일 명언 학습이다. 이는 각 내무반이나 중대교양실에 김정일 명언록을 부착해 놓고 정치상학 시간마다 뜻풀이와 함께 학습을 하며, 매주 토요일 대대 정치 지도원에 의해 점검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려 하고 있으며, 또한 군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sup>20)</sup>

넷째, 전북한 주민들에게 군인처럼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쫓주민을 대상으로 군가를 적극 따라 배우고 부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군가의 기본 선율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노래마저도 혁명의 무기라 칭하고 이를 전주민에게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민일치운동', '우리학교·우리초소운동' 등을 통한 각종 대군 지원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또한 군대식으로 개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1)</sup>

이렇듯 북한 사회는 전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準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긴장의 고조를 통한 대내적 통합을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태는 군부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흡사 전사회의 군사 병영화와 같은 경직된 구조로 전화해가고 있다.

16) 「내외통신」(1997. 4.1), 제10537호, 2면.

17) 「내외통신」, 일간 제10565호에서 재인용.

18) 「로동신문」(1997. 8.15)과 「내외통신」, 일간 제10745호에서 재인용.

19) '3대 위인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말한다.

20) 「내외통신」, 주간 제1059호.



##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군부의 역할간의 상관관계

###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불완전성의 요인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성 문제는 붕괴에서부터 체제 유지라고 하는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왔다. 이제 대체로 모아지고 있는 분석의 지점은 단기적 안정성의 문제보다는 북한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중장기적 안정성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즉, 김일성 사망 후 3년 동안 북한 사회는 심각한 식량난·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통치 하에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그 정치적 안정성은 또한 단기간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유일지배 체제에 의한 비효율성의 가중과 경제적으로는 개방·개혁없이 회생 불가능한 왜곡된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변화없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 속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우선, 김정일후계체제는 김일성을 중심으

로 하는 항일혁명 1세대들의 절대적 후견 하에 이루어졌고, 김일성 사후 '유혼 통치'로 명명되는 '죽은 수령'의 카리스마를 등에 업고 통치하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70년 초부터 후계 승계 과정을 거쳐 당·정·군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확고한 후계체제의 기반을 닦았으며, 북한 사회 작동 이념인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북한 사회의 구조적 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현 북한 권력 집단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엘리트 분석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제기했듯 '황장엽 망명 사건'과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는 '당 일꾼'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sup>21)</sup>도 권력 엘리트들의 결집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권력 엘리트의 내구력 문제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둘째,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북한의 현실은 어찌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유지해가는 것은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이다. 북한 지도부는 위기 관리의 중심을 군부로 이전시킴으로써 쏠 국가를

21) 그 예로서, 시·군당위원회 주관으로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 국방 체육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일과를 아침 달리기, 건강 태권도, 대중 율동 체조로 시작할 것과 휴일, 명절, 체육의 날 등을 기해 단위별로 다양한 체육 경기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전주민을 군사 생활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내외통신」, 일간 제10669호).

22) 「내외통신」에 따르면, 평양방송은 3일 해설을 통해 "당 일꾼들이 인민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면 인민의 항거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며 부정부패 및 이탈된 복무 자세를 신랄히 비판했다(「중앙일보」(1997. 8.4)).

일사불란한 명령체제로 일원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 양상으로 나타날지, 장기적 양상으로 남을지의 문제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정상적인 사회 작동으로 볼썽할 것인가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對북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잣대로 등장한다. 붕괴, 내부적 붕괴, 연착륙 정책 등의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들 속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와 심각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는 정치의 심급'이라는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정치 작동은 제 구실을 해낼 수 없다.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정치의 작동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단적인 예이다. 경제난으로 일궈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작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없이 성장도 도모할 수 없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의 경우,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의 조심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정

일 자신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지만,<sup>23)</sup> 기존의 방충망식 개방 정책을 유지하리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개방으로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체제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북미·남북·북일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희생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개방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인가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 권력 엘리트 내부의 갈등 가능성

북한의 절대적인 유일 통치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한 지 햇수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정지 작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지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 작업은 아직 가시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3년상에 해당하는 1997년에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주석직과 당 총비서직의 공석은 바로 당과 대중을 수직적으로 배열할 기준점의 부재를 의미한다. 물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김정일이 차기 지도자임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 암묵

23) 8월 13일 김정일이 지난 4월 1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제목의 저작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 속에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가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만나 민족의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1997. 8.14)).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엄청난 식량 부족을 비롯한 체제 위기 속에서 공식적인 지도자의 부재는 수령을 중심으로 생활해온 북한에게 표류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이다. 사상 최대의 흉수 피해에 또 다시 수재가 겹치고, 여기에 사회주의 일반이 보여준 구조적인 경제 위기의 측면까지 결합된 관계로, 오늘날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경제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정권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부 엘리트를 통해 체제적 안정성을 모색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난 해소를 위해 대미 관계 개선과 대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형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양자가 북한체제의 성격상 상당히 상호 모순적인 형태로 작동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소위 '강경 세력'과 경제 및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위 '온건파' 간의 정책 논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체제가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이견 그룹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논쟁은 여타 국가와 질적 차별성을 뚜렷이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두 가지 긴급한 현안 즉, 체제 유지와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가 북한 사회 각 부문의 권력 엘리트들의 정세관과 각 부처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요한 현안마다 각 정치 세력마다 '제한적인 정책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길은 북한 자체 내의 자기 관리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기제는 효력을 발생하는 데 대단히 한계적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관건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협력을 추진하는 소위 '연착륙' 정책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를 유도하는 강경한 대북 고립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단기적으로 유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점진적 자기 개혁을 유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대북 포용 정책에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sup>24)</sup>

군부 위상 강화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군부의 위상 강화가 북한 사회에

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냉전적 대결 구조의 해체,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북한의 구조적 경제난의 증폭이라는 사상·지도·경제의 세 부분이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면서, 이 급격한 사회 변동의 여파를 막아내기 위해 군부를 동원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사회 변동이 격렬한 양태로 발생한 것은 아니나, 혼란의 사전적 예방과 체제 고수를 위해 군부의 위상 강화 및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부의 위상 강화에 따르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군의 개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53년 구동독의 폭동, 1956년 헝가리·폴란드의 반소 폭동, 최근에는 천안문 사태 등의 반대 세력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군 개입의 효율성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개입은 일시적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는 있지만 잠재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폭적으로 내재시켜 그 폭발성을 가중시킬 뿐이며, 군의 개입을 상시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북한같이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주장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사상 우위의 폐쇄적 사회 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체제 불만적 폭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한 김정일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군부가 '수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정치적 개입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군부의 위상 강화가 단기적 안정성(불안정성을 내포한)외에는 그 이상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군대의 속성상 수직적 명령체제로서, 대중들의 창의성은 무시되고 명령과 지시만이 존재하는 일원적 구조이다. 이는 주체사상에 의한 '유일사상체계'에도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 병폐이지만, 군은 이 체계가 가장 철저히 지켜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전사회의 병영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이미 많은 부분 억압당한 대중의 창발성은 더 더욱 억압당할 것이고, 이것은 전사회를 체제 수호라는 미명 하에 '죽은 사회'로 치닫게 하는 장기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개혁 내지는 개방의 수위와 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부가 현재 정치에 깊숙이 개입

24)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을 토대로 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대한 자세한 참조는 최성(1996, 9.20), 「바람직한 대북 정책: 4강 교차 승인과 평화 통일」, 제4회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북미 관계와 한국의 대북 정책' 참조.

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방의 폭이 넓을수록 개방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위상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갈등들이 군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면, 심각한 정권의 위기를 도래할 것이며, 만약 군부 집단이 정책적 갈등에서 승리한다 해도 개방 정책의 좌절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궁핍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일단, 현재까지 김정일의 군 장악력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된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군부의 움직임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군부의 정치적 개입의 확장은 경제적 희생 정책에 장애로 존재할 것이다.

셋째, 60년대부터 추진해온 국방 병진 노선에 의한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은 북한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의 원인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군수 산업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불균형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 산업의 비용을 대폭 줄여야만 한다. 이 방법으로는 남북간의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로 군수 산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지만, 현 군부는 남북한간의 국방 경쟁에서는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즉,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도 군부는 장애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 전체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경제적 개방 정책의 장애로 존재하고, 남북 관계 속에서 보수적 정책으로 인해 장애로 존재하는 군부가 현재 북한 정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김정일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단기적인 안정성은 나타날지 모르나, 장기적인 문제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는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는 장기적인 불안정성의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정책 변화를 통해 정상적 상황으로 돌백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맺음말

북한 사회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따른 붕괴에 대한 예측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위기 국면을 북한의 경우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를 통해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는 쿠데타적 상황이나, 전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상적 국가운영체계이다. 이는 북한 사회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왜곡된 구조이지만 그런 구조로 국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군의 특수성인 상명 하달만이 존재하고 하의 상달의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비상적

위기 수습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유발시킨다. 북한의 경우, 극도의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체계가 이미 마비됨으로 인해, 농민 시장이 상시화되고, 주민들의 이동 또한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서의 밀무역이 당국의 목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은 사회 통제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지도부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와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는 군을 통해 사회적 마비 상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로 전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 작동 논리는 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군인처럼 머리를 깎아라”, 김정일을 “복습으로 사수하라” 등의 선전과 전주민 대상으로 벌어지는 ‘애병운동’, ‘군민일치운동’ 등은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기에도 버거운 북한 주민들에게 관통되기에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당·정 활동의 원상 복구를 이루어야 한다. 그 계기는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 승계 시점과 궤를 같이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총비서와 주석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당대회나, 당 전원회의의 그리고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총비서의 경우,

당대회를 통하지 않고 전원회의에서 추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당의 정비 작업이 선행될 것이다. 주석직의 경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대대적인 선거와 사전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기를 매개로 당 및 국가 기구를 재건하면서 군를 제 위치로 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김정일 자신이 당과 국가 기구를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공식 권력 승계를 매개로 주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의 비전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김정일의 공식 권력 승계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즉, 북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극복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많은 사회적 왜곡과 모순을 증폭시키는 군부 중심의 비정상적 운영시스템은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당과 국가 기구의 마비 상태를 해소하고, 정치적 결단을 통한 개방과 개혁의 폭의 확대와 정치적 개혁의 수순을 밟지 않는다면 김정일 정권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뿐이다.